

민선 6기 복지 분야에 대한 제주도정의 방향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 영 태

1. 들어가며

더 큰 제주를 표방한 민선 6기 도정이 출범하였다.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위하여 세계와 교류하고 융합하는 ‘더 큰 제주’, 포용·창조·생태·협력적 성장의 ‘새로운 성장’,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를 키워드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로 제시하였다.

매번 선거철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시끄러운 방송과 상호 비방 등 각 후보의 공약도 알지도 못한 채 인물론이나 정당론, 학연·지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거가 치러졌다. 물론 4월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조용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도 한몫을 했다고 본다. TV토론회와 언론보도나 SNS 등 각 후보자의 공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짐으로써 제주도민은 새로운 제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글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 도정의 복지 정책 방향을 위하여 공약 검토와 함께 현재 변화되고 있는 복지환경을 연속성의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복지공약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 분야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복지패러다임에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민선 6기와 복지정책

1. 제주 여건

제주특별자치도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타지역의 경우 유입인구에 비하여 유출인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제주지역은 오히려 유입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인구현황은 2013년 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인구수는 여자 300,855명, 남자 303,815명으로 총 604,670명이다. 외국인은 여자 4,533명, 남자 6,311명으로 총 10,864명이 제주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를 크게 연령대로 구분하면 연소연령인구(14세이하)는 98,936명(16.7%),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415,565명(70%), 노령인구(65세이상)는 79,305명(13.3%)이다. 생산연령인구와 노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연소연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예산은 2013년도 3,366,685백만원에서 2014년도는 3,582,4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4%가 증가하였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2014년도 797,04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24%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보육예산이며, 다음으로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건 등이며,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훈, 노동 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예산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복지관련 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청소년	노 인	장애인	가정위탁 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인 원	21,187	125,173	79,305	32,673	345	9,791
인 구 대 비	3.57	21.08	13.40	5.50	0.06	1.6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경우 생활시설 118개소와 이용시설 754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용시설 가운데 사회복지관의 경우 제주시에 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동지역에 5개소가 인접거리에 밀집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 복지	장애인 생활	정신요양 노숙인	사회 복지	기타장애인 시설	아동 생활	여성 복지
시설 수	118	63	13	3	2	17	11	9
보호 인원	4,379	2,957	476	357	6	102	345	136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표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장애인 복지관	기타 장애인 시설	노인 복지 회관	사회 복지	어린이 집	여성 상담소 등	지역 아동 센터	다문화 가족지 원센터
시설수	754	9	4	6	33	6	2	604	10	7	7
1일 평균 이용인원	37,354	2,929	444	2,425	839	820	71	27,256	106	2,065	399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제주특별자치도내 청소년 관련시설은 모두 78개소로 46개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32개의 청소년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표 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관련 시설

(단위 : 개소, 명)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 흥센터	청소년 쉼 터	청소년 공부방
78	46	3	5	20	3	15	32	2	1	5	2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 복지 분야 정책 이슈¹⁾

복지분야의 공약을 토대로 최근 변화되고 있는 복지분야의 정책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기에 걸쳐 수립 추진되고 있으며, 3기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행복을 향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으로써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향후 민선 6기 제주도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제주도정의 복지 관련 방향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되고 있는 복지 관련 정책을 크게 도입에서 확대, 정착으로 구분하여 보면 1961~1987년은 성장을 통한 극빈층 빈곤탈출을 목적으로 생활보호법('61), 의료보호법('77) 등 공적부조와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산재보험('64), 의료보험('77) 등 사회보험 제도가 하나둘 도입되는 제도 도입기였다. 아울러, 사회취약 계층인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마련되었다.

다음으로 제도 확대기는 1988~1999년으로 이 시기는 복지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더불어 국민연금 도입('88), 4대보험 전 국민 확대, 영구임대주택을 통한 주택복지정책 등이 시작되었으며, 문민정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 복지구상'을 발표하는 등 '삶의 질과 복지'를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며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시적 생활 보호 제도와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 정착기는('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00),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확대('00), 건강보험 통합('00) 등 사회통합과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사회투자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05),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07), 사회서비스 바우처('07), 노인장기요양보험('08)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이 확대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와 근로장려세제(EITC, '09)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1) 사회복지분야 정책 이슈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내용 가운데 일부를 재정리하여 제시하였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표 5〉 역대 정부별 주요 복지정책

정부별 (대통령)	3·4공화국 박정희	5공화국 전두환	6공화국 노태우	문민정부 김영삼	국민의 정부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	이명박정부
	(1960 ~ 1980)	(1981 ~ 1987)	(1988 ~ 1992)	(1993 ~ 2002)	(1998 ~ 2002)	(2003 ~ 2007)	(2008 ~ 2012)
정책기조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사회보험	산재보험(1964)			고용보험(1995)	산재/고용 보험적용 확대 (2000~05)		
	건강보험(1977)	건보 확대	전국민건강보험 (1989)		의약분업 (2000) 건보통합 (조직 2000, 재정 2003)		노인장기요양 보험 (2008)
	공무원연금 (1960) 국민연금 (63 분리) 사학연금 (1975)		국민연금(1988)	국민연금 확대	전국민 국민연금 기반구축 (1999)	「국민연금법」 개정 (급여인하 등, 2007)	「공무원연금법」 개정 (2009)
공공부조 국가보훈	생활보호제도 (1962) 국가보훈 (1962) 의료보호제도 (1977)	생보대상자 직업훈련 (1981) 영세민종할대책 (1982) 사회복지전문 요원 배치 (1987)	저소득층 대상 영구임대주택 공급 (1989)		경로연금 (1998)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2000)	「기초노령 연금법」 (2007) 차상위계층 지원 (의료급여, 자활, 2004) 장애수당확대 (2005)	기초노령연금 (2008) 장애인연금 (2010)
사회서비스	가족계획사업 (1962)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 발표 (1978)	노인복지기반 마련 (1981) 재가노인 복지사업 (1987)	장애인복지 대책위원회 구성 (1989) 장애인 등록제도 (1988)	공중보건, 건강증진 정책확대 (1995)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1995)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1998)	보육확대 (2004) 저출산·고령사회 본격대응 (2005) 사회서비스 일자리 (2004) 퇴직연금제도 도입 (2005)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006)	5세아 누리과정, 0~2세아 무상보육 (201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ALMP, 2008)

정부별 (대통령)	3·4공화국 박정희	5공화국 전두환	6공화국 노태우	문민정부 김영삼	국민의 정부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	이명박정부
교육비지원							든든한 학자금 대출 (ICL, 2010) 맞춤형국가 장학금 (반값등록금, 2012)
조세지출							근로장려세제 (EITC, 2009)
참고사항	「군사원호법」 (1950, '61폐지)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법」 (1962, '84폐지) 「의료보호법」 (1963) 「국민복지연금」 (1973)	「노인복지법」 (1981) 「심신장애자 복지법」 (1981)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86)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1986)	장애인복지법 (1989) 장애인 고용촉진 법률 (1990)	「삶의 질 세계화 국민복지 기본구상」 발표 (1995) 「고용보험법」 (1993) 「지역보건법」 (1995) 「국민건강 증진법」 (1995)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제시 (1999) 외환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기본틀 구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00) 「국민건강 보험법」 (1999) 「건보재정 건전화특별법」 (2002 ~ 06)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2004.2) 「비전 2030」 발표(2006)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2005) 일부 복지사업 지방이양 (2005)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2006)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 「장애인차별 금지법」 (2012)	「휴먼뉴딜」 발표 (미래기획위원회) 원전노령연금 수급자 발생 (2008) 에너지복지 기반확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협동조합 기본법」 (2012)

자료 : 최병호 외,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p.35에서 재인용

사회보장계획의 정책 목표를 민선 6기 도정과 연계하기 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전이 보장 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생활영역별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으로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출산, 양육, 실업, 질병, 노령 등 기본욕구 보장과 생활영역별로는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고용, 건강,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다양한 욕구

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였다. 가구특성별로는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가구 등 취약가구에 나타나는 특수욕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재정여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국민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이다.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적 문제가 있는 모든 국민이 복지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 아동에 대한 투자, 경력단절 방지, 취약계층 고용 안정 등과 더불어 중산층의 자아실현 경로로서 소질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사회보장계획의 핵심 가치는 ‘맞춤형 고용-복지’이다. 맞춤형 고용-복지는 단순한 생계보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일’은 소득을 위한 노동의 의미를 넘어서 개인의 삶의 의지, 사회적 관계 등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활동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

고용·복지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복지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꿈을 이루고 각자 타고난 소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키고, 여성 경력단절 방지, 취약계층 고용안정 등과 더불어 중산층 노인이나 장애인의 자아실현의 경로로써 맞춤형 고용-복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삶의 주기를 함께하는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는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빈곤, 실업, 돌봄, 주거, 질병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그 요인을 경감시키며, 공통적인 기본욕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개인·가구별 상이한 특수욕구는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수요를 세분화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적·분절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정책을 설계하였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새로운 생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

식으로 구축하는데, 복지수요의 다양화와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며,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에 더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인 민간영역의 새로운 제공 기관까지 아우르는 공급기관의 다변화를 제시하였다.

사회보장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원칙은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균형적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기준의 공정성, 세대간·계층간 부담의 형평성 확보,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사회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사회복지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서 민선 6기 출범으로 제시된 공약 가운데 장애인 공약,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공약 등은 적극적으로 연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복지 부문 공약

민선 6기 제주도지사 공약은 “도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복지·맞춤형 복지를 이루겠습니다”라는 큰 틀 아래 크게 11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우선,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은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찾아오지 않는 도민에게도 찾아가 도움을 드리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방문 서비스’ 및 ‘포괄적 복지 서비스 지원’ 시행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 예상 대상자 사전 모니터링, 복지지원 시스템 개편, 복지코디네이터 제도 시행이 실행과제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는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 도시) 추진으로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장애 없는 환경 조성 및 ‘장애없는 거리’와 ‘장애없는 공원’ 등 일상의 생활환경을 무장애디자인을 확대 ‘장애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본부와 노인장애인부서와 연계 ‘제주 유니버설 디자인 5개년 계획’ 수립, 시범적 ‘유니버설 디자인 정비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24시간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4시간(휴일, 야간) 어린이 돌봄시설 설치 확대, (구)제주시 등 도심 집중을 방지하고 거점지역별 돌봄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유도할 것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는 양육과 재활, 교육, 취업을 연계한 장애인 자립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장

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일과 복지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장애인 지원사업과 체계를 통합관리 후 분야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는 광역 치매센터 설립·운영과 어르신 공경조례 제정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다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 방법 연구, 치매관계자 관리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치매 컨트롤타워’ 구축과 어르신들이 당연히 대접받고 공경 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 번째는 조손가정, 이혼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시행이다. 이는 가족해체로 인한 조손가정과 이혼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단위별, 가구단위별, 생애주기별 등 서로 다른 복지욕구에 대한 정책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아동교육, 건강, 생활안정, 소득보장, 취업 등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일곱 번째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를 꼽았다.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의 여건에서 기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물론 결혼이민자 역량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자녀의 사회·학교 적응, 배우자 등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체계화 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것을 제시하였다.

여덟 번째로는 정착주민 지원 확대 및 지원 전담부서 설치를 제시하였다. 이는 최근 제주의 순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으로 정착주민의 조기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관련 추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아홉 번째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제주도내 사회복지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강도 높은 노동에 대하여 적정한 처우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서비스 제고 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열 번째로는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대책 마련으로 가정폭력, 알콜중독,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 자활을 위한 주거, 교육, 취업, 소득향상 등에 대한 포괄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쉼터 입소 및 퇴소 규정

개선, 컴퓨터의 직업프로그램 강화, 퇴소 후 생활안정 자금 확대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교육과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추진이 제시되었다. 이는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아동비만을 줄여 어린이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하여 「아이건강과 건강·생태 제주 발전전략」 수립, 먹거리 교육과 아동비만 줄이기 사업 추진, 아동·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되었다.

복지분야에서 제시된 11개 공약 가운데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공약과 정착주민 관련 공약은 통합되거나 도시·환경 분야로 재분류 되었다.

4. 민선 6기의 복지 분야 역점 추진 과제

제주도는 현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역복지 계획으로 민선 6기 도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공약들이 정책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이며, 도정목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도정방침은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정목표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워 궁극적으로 세계를 품는 제주로 발전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바람, 물, 자연환경 등 공공자원의 가치, 제주인의 문화 에너지 가치, 제주 사람의 가치를 키워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 것이다.

도정방침인 ‘협치’는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여 수평적으로 권력을 나누는 협치로, 도민의 다양한 의사가 다양한 통로를 거쳐 정책 과정에 반영되고, 도민들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협치를 지향하고,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협치를 지향하고 있다.

도정방침의 ‘새로운 성장’은 제주의 가치를 키우고 경제성장의 효과가 도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창의성을 높이고 우수한 두뇌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첨단산업을 제주에서 일으키는 창조적 성장, 청정자연과 문화,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적 성장, 지역 내 경제주체, 외국자본이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적 성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 큰 제주'는 물과 바람, 공기, 8천종의 동식물 등 생명의 근원을 온전히 보전하고, 제주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풍속, 해녀, 제주어, 돌담 등 제주가 지닌 고유한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높여 세계인과 교류하고 융합하는 제주를 만들어, 원래 제주도민, 이주해 온 제주도민, 제주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함께 더 큰 제주를 만들고 아울러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사람을 통합·포용하고 제주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새로운 가치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반적인 복지공약 가운데 전체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 비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분야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 구현을 통해 대상별·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맞춤형 복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III. 복지 분야의 협치를 위한 향후 과제

복지 분야는 가시적인 효과와 체감온도의 격차가 가장 큰 정책 분야이다. 제시되어 있는 10개의 공약이 향후 민선 6기 도정의 중점과제로 단계별 중장기 정책으로 제시되기보다 핵심과제 성격으로 제시되었다. 사실 복지 관련 정책은 정부의 모든 부처에 걸쳐 있으며, 무려 300개 가까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상, 특정 과제만을 제시하는데는 정책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선 6기는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한부모 등 가족, 여성인권, 치매, 노인, 돌봄, 사회복지 종사자, 다문화 등 핵심 개별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약이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주의 복지 여건과 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앞으로 추진될 민선 6기 복지 분야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약과 연계하여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복지 분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산의 부족이다. 다른 개발 사업 등과 달리 복지분야의 예산은 주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 제시된 공약 이외 정책 타킷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복지 정책의 경우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가구소득별 등 다양한 정책 욕구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복지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타킷을 설정 점진적으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복지분야의 정책 추진은 무엇보다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협치를 통해 민간의 자원이 다양하게 연계되고, 다양하게 자원을 발굴함으로써 부족한 예산 등의 한계를 보완하여 상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을 논의할 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복지분야는 정책 체감도를 1℃ 높이기 위한 과정이 매우 지난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듯 예산이나 추진체계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견어내려는 굳센 의지라면 복지 정책 역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정책과 우공이산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반문한다면 이미 우리의 복지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중앙 부처에서도 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여전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책을 선진화 시키고 있다는 점 역시 제주지역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선 6기 도정에서 과감하게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민선 6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주 지역에 맞는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지역이 지역형 복지모델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단체장의 복지 분야의 공약을 살펴보았다. 공약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발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의 새로운 정책 보다는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 맞춤형 지표들을 추가로 모색한다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모쪼록 민선 6기의 공약이 구체화 되어 향후 제주도정의 복지정책을 이끄는 대표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